

중소 지원정책 선별 강화키로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기존의 지원 일반도에서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구조조정으로 전환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한계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상대적으로 유망한 기업을 위촉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판단, 정책자금의 공급과 신용보증 지원을 선별적으로 하기로 했다. 또 기업 신용정보회사(CB)가 정부·공공기관의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CB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옥석을 가려냄으로써 자연스런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비율을 낮추고 보증 졸업제를 도입해 일반기업, 우량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시장에 맡기는 한편, 보증료를 올려 기업의 부담을 다소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 정책 금융제도 개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민간투자유치사업(BTL) 가운데 1조원 규모를 올려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신용보증제도, 크레디트뷰로(CB) 등 금융지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국회에서 정세균 원내대표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분야 확대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편성 여부와 함께 부동산 등록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또 양도세 실가과세 제도는 계획대로 도입하되 양도세율 체계를 개선하고 취득세 등 거래세의 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2/4분기 경제실적 등 전반적인 경기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편성 여부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부산 중소제조업 가동률 하락세 반전

회복세를 보이던 부산지역 각종 경제지표가 다시 주춤거리고 있는 가운데 중소 제조업체 평균 가동률도 울들어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산·울산지회가 18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산활동 조사에 따르면 4월중 평균 가동률은 70.6%로 전월의 72.4%보다 1.8% 포인트 하락해 울들어 계속되던 상승세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는 내수회복세가 예상과 달리 부진을 계속하고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하락 등 악재가 이어짐에 따라 지역 중소제조업체들의 가동률이 하락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업 규모별로는 종업원 50인 미만의 소기업 가동률이 68.4%로 전월대비 1.5% 포인트 하락했고 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기업은 가동률 75%를 기록, 전월대비 2.6% 포인트나 급락했다. 지역별로는 신발과 의복, 염색 등 경공업 및 소기업이 많은 부산지역이 69.8%를 기록, 전월대비 1.5% 포인트 하락했고 기계장비와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등 중화학 공업이 많은 울산지역은 74.5%를 기록해 전월대비 3.4% 포인트 하락했다.

중소 환경문제 대응 취약

중소기업은 환경문제를 기업경영의 필수과제로 인식하면서도 실제 대응 능력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가 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47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도 중소제조업 환경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체의 3.6%만이 환경관리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관리 담당 인력이 없는 업체도 43.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경영과제 중 환경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경영과제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79.8%로 나타난 것을 볼 때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환경분야 중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문은 폐기물(30.6%)과 대기(27.2%) 분야이며 조사대상 업체 중 68.6%가 환경관련 부과금 및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관련 부과금 및 부담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39.6%)과 폐기물부담금(38.0%)이 가장 많았다.

현행 우리나라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42.0%의 업체가 지키기 어려운 규정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27.0%나 됐다. 그러나 중소제조업체는 부족한 인력 및 자금 여건에도 불구하고 환경규제가 현재보다 강화될 경우 39.6%의 업체가 '적극적인 시설투자로 기준 준수에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

“올해 최저임금인상 3%이내 적당”

외국인산업연수생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3%이내가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외국인산업연수생을 활용하고 있는 85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의견조사'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35.3%(301개)가 올해 하반기 경영상태가 '악화' 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이에 따라 41.7%(354개)의 중소기업이 임금을 동결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적당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조사업체의 55.5%(470개)가 '동결' 또는 1~3%인상이라고 응답했고 4~6% 인상은 27.5%(233개), 7~9% 인상은 11.5%(97개) 등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을 높게 인상할 경우 고용이 축소되고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사업체의 54.2%(456개)가 과도한 최저임금인상의 부작용으로 '고용축소'를 지적했고 '사업축소' 17.0%(143개), '해외이전' 8.7%(73개), '투자축소' 8.4%(71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업원 100인 이상의 중견기업(73개)은 해외이전 하겠다는 응답이 18.1%(13개)로 나타나 임금인상이 과도할 경우 제조업공동화와 국내 일자리 축소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고용을 축소할 경우 정규직(48.3%), 외국인(30.6%), 비정규직(21.2%) 순으로 축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규채용 시에는 비정규직(42.8%)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탄력적인 고용관리 선호 의식을 보여 주었다.

노동부, 인도네시아인 고용허가 중단조치

노동부가 이달부터 인도네시아인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를 중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외국인고용허가제에 의해 인도네시아인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규 고용허가와 구직 알선을 이달 초부터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인도네시아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으로부터 입국사증(MISA)을 받고도 보내기로 한 자국 구직자 500여 명을 약속한 시기보다 최대 3개월까지 늦게 보냄에 따라 이 같은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통상 사증 발급 이후 한달 만에 국내로 들어오고 있으나 최근 인도네시아인들이 국내 기업에 인도되는 데는 평균 50~60일이 걸리고 있다. 또 한국에서 취업했다가 시한이 지나 자진 출국하면서 재입국을 허가받은 노동자들에 대한 구직 등록도 받지 않아 국내 체류 인도네시아인들의 재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해 자진 출국을 꺼리고 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인 채용을 신청한 국내 중소기업들은 인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의 불법체류자 줄이기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런 사태가 인도네시아 내 인력 송출관련 브로커 비리 등으로 정상적인 인력 송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수도권 경쟁력 제고 시급”

경기도 내 경제 관련 기관·단체 및 경제인들은 최근 ‘나라경제살리기·일자리창출 범도민대책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정부에 수도권 규제해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를 비롯 수원상공회의소 등 19개 지역상공회의소와 지역언론, 경기경영자협회, 경제관련 기관·단체, 사회단체 및 NGO 등 도내 50여 경제사회단체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범대위 대표에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문병대 회장과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우봉제 회장과 한국노총 경기도지역본부 이화수 의장을 공동대표로 추대했다. 범대위는 설립취지문을 통해 “경기도는 대한민국 산업의 핵심지대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도권 규제에 묶여 기업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며 “정부의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은 결국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는 물론 해외유출을 촉진시켜 국민들의 가장 소중한 일자리를 빼앗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사이버’로 중기 수출 지원

서울시 산하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사이버마케팅 지원사업’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의 수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진흥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는 사이버무역지원사이트(www.hiseoultrade.com)를 통해 지난해 390만달러의 중소기업 수출이 이뤄진데 이어 올 들어서 수출 계약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진흥원 관계자는 “올해 총 120개 수혜업체를 선정해 거래제안서를 전 세계 바이어들에게 발송하고 있다”면서 “수출경험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 의무대출 비율 축소 건의

지방은행들이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낮춰줄 것을 한국은행에 건의했다.

최근 한은에 따르면 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6개 지방은행들로 구성된 지방은행협의회는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이 60%로 시중은행(45%)이나 외국은행 지점(35%)보다 지나치게 높아 경쟁에서 뒤지고 있다면서 이 비율을 시중은행 수준으로 낮추도록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 건의내용을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했으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에 관한 규정의 보완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면서 당장 이를 개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은은 중소기업대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대출비율에 미달한 금액만큼 총액한도대출 지원액을 삭감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울산시, 중소 수출기업 해외홍보 지원

울산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신규 거래처 발굴과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홍보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지원 계획에 따르면 시는 지역 내 30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00만원(연간 8천만원) 한도 내에서 국내외 전문잡지, 신문, TV, 라디오, 버스 및 택시이용 광고 등의 매체를 통해 홍보한다. 또 영어, 일어, 중국어 등 해외마케팅용 외국어 카탈로그를 업체별로 인쇄물, CD-ROM, 전자 카탈로그 등의 형태로 제작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지원업체 모집 및 선정, 사업실적 관리 등은 한국무역협회 울산지부(052-287-3060)에서 추진키로 했다.

“재외공관 중소기업 전진기지로”

앞으로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에 나설 때 재외 한국공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외교·통상업무 수행 과정에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은 최근 외교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 기관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외교부는 “대외 경제·통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민간경제계와의 협력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의 협력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외교부는 DDA, FTA 협상 등 주요 통상협력 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재외 공관을 통해 수집된 경제·통상 정보를 중소기업에 수시로 제공키로 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교섭 결과를 중소기업에게 브리핑해 주는 것은 물론 통상정책에 관한 설명회와 워크숍 공동개최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